

전주매일

2019년 3월 26일 화요일 (음 2월 20일) 제2255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전주·청주를 특례시로 지정하라”

전주·청주 국회의원들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
김승수 전주시장 “광역시에 대한 작은 대안이 특례시 불균형 바로잡아달라는 외침”



김승수 전주시장은 25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를 비롯한 전주지역 국회의원, 청주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주와 청주의 특례시 지정을 촉구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25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를 비롯한 전주지역 국회의원, 청주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주와 청주의 특례시 지정을 촉구했다.

또한, 전주와 청주 등 여야 국회의원 22명은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 인구 50만~100만 사이의 광역시가 아니지만 행정수요가 100만을 초과하거나 도청소재지로 중추도시 역할을 하는 기초자치단체를 함께 특례시로 지정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에 불균형을 초래했던 가장 큰 원인중에 하나는 바로 광역시다. 광역시 없던 전북과 충북은 그런 시스템 아래서 낙후될 수밖에 없었고 차별받을 수 밖에 없었다”며, “광역시는 아니지만 그에 대한 작은 대안이 바로 특례시”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지역불균형 해소와 주민중심 지방자치시대를 열기 위해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전주와 청주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것은 지방분권을 완성시키고 환황해권 경제시대를 촉진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정부안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전주와 청주를 환황해권 경제

시대 거점도시로 육성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발의에는 정동영, 강창일, 김관영, 김광수, 김영호, 김중회, 김한진, 도종환, 박주현, 변재일, 박주현, 안호영, 유성엽, 오제세, 이용호, 이춘석, 장정숙, 정운택, 정운천, 정인화, 조배수, 주승용, 황주홍, 홍익표 등 여야 국회의원 23명이 참여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구 85만 명의 청주와 인구 65만 명의 전주도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전주와 청주는 주민들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지역 맞춤형 발전 전략을 개발, 성장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대한민국의 자치단체, 그리고 광역지자체는 시장에서 파는 물건이나 상품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지역들이 함께 잘 살아야 한다는 균형발전의 가치가 헌법에 있는 것이다”며 전주와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을 호소했다.

아울러 그는, “수도권에 있는 세 도시와 경남 창원 이렇게 네 개 도시만 특례시로 지정된다면 결국은 특례시는 국가불균형 특례시가 될 수밖에 없다”며, “전북과 충북이 특례시 지정

을 지원해 달라는 것은 특혜를 달라는 게 아니고 바로 불균형을 바로 잡아달라는 외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를 주도한 정동영 대표는 “한국경제의 중심축은 미국과 일본 등 태평양을 중심으로 한 동부축에서 중국과 동남아 등 환황해권을 중심으로 한 서부축으로 조금씩 이동하고 있다”며, “환황해권 경제의 핵심도시인 서울과 대전, 광주를 더욱 촘촘하게 연결할 전주와 청주를 잇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을 견인하는 동력이 될 것”이라며 전주와 청주의 특례시 지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송호철 기자

“김학의 사건, 광상도 개입 의심”... 법무부, 재수사 권고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우선 재수사를 권고하기로 했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과거사위는 이날 오후 5시40분경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김 전 차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또는 뇌물수수 혐의로 재수사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광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과 이종희 전 민정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하는 방향을 권고하기로 했다.

앞서 사건을 조사 중인 과거사위 산하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이 2005년부터 2012년 사이 건설업자 윤종천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이와 함께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했던 광 의원과 이 전 비서관이 김 전 차관 사건을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거나, 경찰 수사지휘라인에게 부당한 인사조치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또 ‘김학의 동영상’을 감정하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동영상이나 감정 결과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등 수사에 개입한 정황도 있다고 판단했다.

조사단은 이날 오후 2시 열린 과거사위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김 전 차관 사건 중간보고를 하고 재수사

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김 전 차관이 지난 22일 출국을 시도하다 긴급하게 출국금지 조치된 점 등에 비춰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강석훈 기자

본사 인사

▲장인천 임:부장 명:익선주제기자

(3월 26일자)

대한민국 대표 국악등용문

전주대사습놀이 6월 7일 개막

명고수부 폐지 대신 교수·민요·무용 신인부 신설
학생 전국대회 통해 판소리 등 9개 분야 꿈나무 발굴

대한민국 국악분야 최고의 등용문인 전주대사습놀이 단오날을 기점으로 전주에서 펼쳐진다.

전주시와 전주대사습놀이 조직위원회는 ‘제45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를 오는 6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국립무형유산원과 전주한옥마을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전주대사습놀이는 조선 정조 8년인 1784년에 시작되어 200년이 넘게 우리 소리의 맥을 이어오면서 전통성과 역사성을 담고 있다.

올해 대회에서는 판소리명창, 농악, 가악, 무용, 민요, 가야금병창, 판소리일반, 시조, 궁도, 판소리신인, 민요신인, 무용신인, 교수신인 등 13개 분야의 예선을 치른 뒤 본선을 통해 국내 최고 실력의 국악인을 뽑을 예정이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 조직위는

명고수부를 폐지하는 대신 교수와 민요, 무용 분야의 신인부를 신설했다.

또한 학생 전국대회를 통해 판소리, 농악, 관악, 현악, 무용, 민요, 가야금병창, 시조, 초등판소리 등 9개 분야에 걸쳐 국악 꿈나무를 발굴한다.

올해도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판소리 명창부의 장원에게는 대통령상과 함께 상금 5000만원이 수여된다.

황권주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대한민국 국악계를 이끌어 갈 최고의 명인·명창의 치열한 경연과 더불어 결국 본 대회와 공연이 관객 모두와 함께하는 신명나는 축제의 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치열하게 고민하고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송호철 기자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추진

도교육청, 학교만족도 설문조사
학생·교직원 등 데이터 제출
상산고에 요청 방문일 신청 안내
내달 서면·5월 현장평가 실시

전북교육청은 지난 22일 이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추진 일정과 관련해 30일 오전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먼저 도교육청은 25일 학교만족도 설문조사서를 위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데이터 제출을 상산고등학교에 요청했다.

또한 학교 현장평가를 위한 방문 일정 신청을 안내했다.

이에 상산고는 오는 29일 학교 만족도 설문조사 데이터 제출 및 현장평가 일정을 도교육청에 신청하면 된다.

4월 중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평

가 방법 및 평가 지표 등 설명회를 갖고 전북교육청과 공동으로 서면평가를 할 계획이다.

이후 5월 중에 전북교육청 추천 7인의 평가단과 한국교육개발원은 1~2회 걸쳐 학교 방문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온라인으로 학교만족도 설문조사서를 실시한다.

오는 6월 경에 ‘전라북도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평가 결과 심의를 거쳐 교육부에 자율형 사립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 보고를 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자율형 사립고 재지정 여부는 기존 원칙대로 형평성 있게 추진하며,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재차 밝혔다.

한편 2019년 자율형 사립고 평가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전국적으로 24개교가 평가 대상이며 이중 전북도는 상산고 1곳이다. /장은성 기자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JJC전북

YouTube

kakaoTV

NAVERTV

Dolm

NAVER jjctv전북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79

Btv ch.285

tv ch.253

JJC본사: <http://www.jjctv.co.kr> Tel 02-2057-0011 Fax 02-2057-002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 23F

JJC전북총국: <http://jjctv063.co.kr> Tel 063-246-0885 Fax 063-286-0887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 5층